



집회·시위
권리를 지키자

3면

홍범도 흉상 철거와
윤석열의 역사 전쟁

6~11면

교사 운동이
첫 성과를 내다

14면

"국제 협력"의 파산을 보여 준
유엔 기후정상회의

16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은 차라리 분당해라

2면

홍범도 격하운동 등

윤석열 정부의 역사전쟁은 우익적 공격이다

관련 기사 6~11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은 기회주의자들에게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분당해라

정의당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김문성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9월 26일 영장실질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과반선인 148표를 한 표 넘긴 149표로 가결됐다. 정당별로 가부 입장을 밝힌 것에 기초해 계산해 보면,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최소 29명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인데도 민주당만 표결 방침 당론도 못 정하고 찬성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2월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해 벌인 반대파 탄압의 일환이었다.

국회 회기 시작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굳이 이 시기를 선택한 것은 추석 여론을 앞두고 이재명에게 거짓말쟁이 파렴치범이라는 오명을, 민주당에게는 '방탄 국회'라는 이미지를 씌워 반윤석열 정서를 악화시키고 부동산이 반윤석열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보자는 계산이었다.

이는 체포동의안 처리시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한 제안 설명에서 잘 드러났다. 무려 30분이나 떠돌았는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설득력 있는 논거나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이렇게 나쁜 놈'이라는 식의 비난만 가득했다.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수사·기소를 해 재판에 넘기고 처벌하는 일을 못하는 게 전혀 아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고, 다음 선거에도 출마하려고 하는 제1야당 대표다. 도주할 우려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의 중대 범죄라는 주장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구속수사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수사 검사로 이름 날렸던 한동훈이 이걸 모를 리 없으므로 이날 한동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반대파 탄압의 일환이었다

그저 여권 핵심부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걸맞은 대국민용 발언을 한 것이다.

사실 검찰·경찰은 이미 1년여 동안 이재명의 여러 혐의에 대해 관련자 구속,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 강도 높게 수사를 해 왔다. 기소해 재판이 시작된 문제들도 있다.

무엇보다,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도 제시된 게 없다.

이 모든 이유로 법원은 26일 영장실질 심사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옳다.

압압한 기회주의자들

여권과 검찰은 체포동의안 찬반 문제로 야권, 특히 민주당이 분열하기를 기대했고, 성공했다.

민주당은 20일간 단식 중인 당대표 자신이 부당한 탄압에 맞서자며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부결 당론을 못 정했다. 당내 기회주의적 의원들 때문이었는데, 결국 그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강경 개혁 염원층에 휘둘리지 말고 존경받게끔 온건하게 행동하라는 여권의 설득이 통한 듯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은 표결 당일 “민주당 의원들은 개딸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흔히 “개딸”은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우파가 그 용어를 사용할 때는 원뜻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과 개혁 염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좀 더 광범한 대중을 일컫는다.

그런데 최근 국면은 윤석열 지지가 더 떨어지고 정당 지지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추세였다. 현 시점에서의 국민 상식(여론)은 개딸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

민주당 기회주의자들은 그 기반과 공천 가능성 때문에 우익 못지 않게 “개딸”들을 싫어한다.

이 기회주의자들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지난해 검찰의 정치 수사를 막자는 “검수완박” 투표에는 적극 찬성했다.

검찰이 자기들을 겨눌지도 모를 때는 ‘개혁’ 운운하며 뭉치더니, 그 칼날이 당내 강경파를 향하니까 검찰의 정치수사에 널름 협조한 것이다. “부결 호소는 오히려 역효과”라는 책임 전가를 하면서 말이다.

결국 온건파를 대리해 체포동의안 부결 후 당권(사실상 공천권) 배분 약속을 이재명에게 받아냈던 원내대표 박광온도 그들을 통제하지 못한 듯하다. 결국 그는 표결 이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분당 가능성이 당장 불거지진 않아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내분은 더욱 심해질 듯하다.

21일 낮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및 항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야비한 공격에 더 큰 저항으로 맞서자며, 민주당 “수박” 의원들에 대해서도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원칙있음을 가장한 정의당의 기회주의

정의당이 또다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은 기회주의적 행동일 뿐이다.

매우 온건하긴 해도 좌파 정당이 제1야당 지도자 체포에 찬성하는 것은 마치 그런 방침이 양식과 상식에 부합한다는 인상을 주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여권의 공격에도, 민주당 온건파의 반란 표결에도 정의당이라는 포장지가 정치적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원래 정의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조심스런 말투였지만 옳게 비판했었다.

“구속영장 청구 시기와 내용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획이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고] ...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패와 국민적 분노를 비껴가게 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전략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 놓고는 찬성 표결을 한 것이다!

2월 국회에서도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었다. 당시 정의당은 잇따른 선거 실패의 위기감 속에서 민주당과 어떻게든 차별화해 비윤·비명 부동층에서 새 지지층을 찾으려고 절치부심 하하던 때였다.

그때 정의당 지도부·의원단은 찬성 논리가 균색하자, 불체포특권 포기과 체포동의안 찬성이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는(정의당 의원에게도) 당론으로, 구체적인 사안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런 회피는 우익 정부의 공세에 대한 저항을 스스로 억제해 당의 온건화를 재촉하는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었다. 전술에 관한 한, 추상적 원론은 부차적 고려 사항이고 구체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1일 오전 원내대표 연설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 반헌법적·반민주적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기회주의적으로 선거적 이익 계산에 몰두하다가 자승자박에 빠져,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파 탄압을 돕고, 보수 혐오 대중과 정서적으로 더 멀어져 버렸다.

집회·시위 권리 공격

— 항의할 권리를 지키자

임준형

9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금지, 소음 규제 강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 제한, 집회가 실제 실시되는 기간으로 현수막 게시 제한, 질서유지선 침범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동시에, 이런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공공질서 위협,’ ‘평일 출퇴근 시간대’ 등 자의적 기준으로 집회신고 접수 단계부터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드론을 이용한 채증, 집회 장소에 경찰 형사팀 배치, 관서별 집회·시위 수사전담반 운영, 경찰관 피해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예 ‘불법’ 집회 해산에도 더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지금 안보와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이는 최근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 등 언론 탄압과도 궤를 같이한다.

최근 교사 운동이 두 달간이나 대규모 주말집회를 벌이며 정부의 징계 위협을 철회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싸울 자신감을 준 것도 집회·시위의 권리 공격을 서두르는 배경일 것이다.



9월 16일 철도노조 파업 집회에 난입한 경찰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집회·시위 권리 공격 방안들을 정당화한다.

헌법에 “평온권”과 “교통권”이 없다는 점은 제쳐 놓더라도, 다른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도 주지 말라는 것은 집회·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은 언론과 교육기관 등 자신의 입장과 세계관을 전파할 온갖 수단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디어 등을 활용해 얼마든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시대”라며 집회·시위의 권리 제한을 정당화하지만, 그런 기관들에 접근할 능력은 부와 권력에 따라 천지 차이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비판 언론들을 협박하고 탄압한다.

따라서 집회·시위는 노동자 등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알리고 관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 압박, 버스 요금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가령 양회동 열사를 분신케 한) 노동운동 탄압 등이 낳는 고

통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일부 사람들이 교통 체증을 겪고 구호가 시끄럽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불편을 시위하는 사람들 탓으로 여길지, 정부 탓으로 여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투쟁의 정당성과 힘에 달려 있다.

사소한 불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납득시킬수록 집회·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교통 체증 같은 불편도 커지겠지만, 그걸 감수할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얼마 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10만 명이 넘는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거나 조퇴하고 거리로 나왔지만,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보다는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았다.

철도 파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집회 때문에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 치안 역량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경찰의 우선 순위가 대중의 안전보다 저항을 단속하는 데 있다는 점을 보여 줄 뿐이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왜 중요한가

대규모 집회·시위는 참가자들을 변화시킨다.

자본주의가 낳는 소외, 착취, 차별은 노동자 등 차별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를 통제하거나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선거구에서 원자화된 개인으로서 몇십 초 동안 투표할 수 있어도 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거나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집회·시위에 나서면서 이런 원자화와 수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나설 자신이 있게 되고, 변화의 중심에 서며, 더 전투적인 행동과 급진적인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도 커진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사 운동은 이를 보여 준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다.

교사들은 주말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지속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을 벌여 정부의 징계 위협을 철회시켰고 일부 법 개정도 이뤘다.

특히 9월 2일 집회에 무려 20만 명이 넘는 교사가 모인 것은 9.4 행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 큰 구실을 했다. 물론 9월 4일 국회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고 각자 흩어져 ‘멈춤’만 했다면 효과가 반감됐을 것이다.

이런 거리의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번 교사 운동을 계기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교사가 크게 늘었다.

대규모 집회·시위는 다른 투쟁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고무하는 효과도 낸다. 특히, 노동자들이 파업 등 자신의 경제적 힘을 사용하도록 자극한다면 큰 변화의 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파업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6월항쟁의 성과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쫓기를 박았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런 역학을 미리부터 차단하려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며 정치적 억압에 기대는 것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물론, 그럴수록 윤석열 정부는 더 거칠게 반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 개정도 하기 전에 집회·시위의 권리를 집요하게 침해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2011~2016년 사이 집시법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조항]를 적용한 금지통고가 121건인데 윤석열 정권 집권 1년 차인 2022년에만 219건”에 이른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김선휴 변호사).

이에 맞서 집회·시위를 더 크게 벌이고 특히 노동자들이 동참하며 저항해야 한다.

철도노조 투쟁

고속철도 경쟁 체제는 시민 불편과 노동조건 악화를 낳을 뿐이다

신정환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운행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9월 14일부터 나흘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9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KTX 운행을 포함한 고속철도 운영에 대해 10월 초부터 철도공사 노사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자 철도노조는 2차 파업 일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SRT 노선이 3개(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신설되면서 SRT 열차 수가 부족해지자 기존 2개 노선(경부선, 호남선)의 좌석수가 각각 하루 최대 4920석, 410석이 감소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SRT 노선에 KTX를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공기업 간 고속철도 경쟁 체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 불편을 나몰라라 한 것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 요구가 노사 교섭 사항이 아닌 정부 정책에 해당한다고 버텼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많은 시민·환경·노동·진보정치 단체들이 철도노조의 투쟁을 응원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9월 16일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 집회(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는 부산에서 별도 파업 집회 진행)를 힘 있게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2차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철도노조의 1차 파업 기간에 교사들의 대정부 항의 시위도 재개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철도노조의 2차 파업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정부 정책은 교섭 사항이 아니다'던 고압적 자세에서 물러서 수서행 KTX 운행을 노조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쉽사리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철도산업에서(도) 신자유주의 기조를 천명해 왔다.

지난해 말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철도공사와 SR로 나뉘어 있는 고속철도 분리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



윤석열에 맞서 저항의 가능성을 활짝 보여 준 철도 파업 9월 16일 서울 남영역 인근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쟁을 유도해 나가겠다."

또, 지난해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관제권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한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10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두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떼어 내려고 호시탐탐 시도했었다. 이는 철도 운영에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민영화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이 철도공사 외 업체들이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안을 발의했다. 민영화 반대가 당의 입장이라던 민주당은 조응천의 개악안에 회피하고 있다. 11월 중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철도노조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SR이 철도공사에 위탁한 업무들 중 고객센터 업무를 올해 7월부터 민간위탁 한 데 이어, 2027년부터 도입되는 SR 신규 차량의 정비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현 고속철도 분리·경쟁 체제 유지, 민간위탁 야금야금 확대 등 철도산업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려 한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자 정부가 고속철도 운영에 대해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섰지만 경계를 풀 수 없는 까닭이다.



철도의 공공성 강화는 서비스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임금과 인력도 개선되길 바란다

수년간 철도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서 억눌려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철도 등 공공기관들에 수익성을 높이고 실적 위주의 경영을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적 지표들의 비중을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 노동자들을 경쟁시킨다. 경쟁 시스템은 임금 억제나 구조조정 등 정부 정책을 고분고분 따르도록 하는 무기가 된다.

또한 정부는 철도공사의 적자폭이 크다는 이유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시범 도입된 4조2교대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공사 사측은 올해도 정부의 긴축 기조하에 성과급 지급액을 삭감했고, 교섭에서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제시했다. 인력 충원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철도 노동자들은 불만과 분노가 크고, 임금과 인력 등 노동조건 개선을 원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노총의 영국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
지지 결의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최근 영국노총 대의원대회가 영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이것이 제국주의 경쟁 격화와 경제 위기 속에서 선진국 노동조합 관료가 보여 온 더 큰 패턴과 부합한다고 분석한다.

레온 트로츠키가 1940년 8월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할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제국주의적 쇠락기의 노동조합”이라는 글의 원고가 놓여 있었다. 그 미완성 글은 지난주 영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킨 영국노총(TUC) 대의원대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글의 첫 문장은 이렇다. “전 세계 현대 노동조합 조직의 발전, 더 정확히 말하면 타락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국가 권력과 밀착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 자본주의의 구조가 변화하고, 무엇보다도 경제력의 집중이 심화된 결과라고 트로츠키는 설명한다.

“독점 자본주의는 경쟁과 민간 기업들의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명령으로 움직인다.” 대기업과 기업연합과 국가는 갈수록 상호의존적이 된다.

트로츠키는 노동조합이 이러한 연계에 이끌려 들어간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얽힌 중앙집권적 자본을 상대해야 한다. 그 결과, 노동조합은 개혁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 다시 말해 사유재산 제도에 스스로 적응하는 한, 특히 사적 소유에 적응하는 한은 자본주의 국가에도 적응하고 그 국가의 협력을 얻어 내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여기게 된다.”

제국주의가 낳는 전쟁과 혁명적 투쟁은 이런 과정을 가속시킨다고 그는 썼다.

“각 나라에서 계급 모순이 격화되고, 국가 간 적대감이 격화되면서 ... 사회적 [좌파의 — 역자] 개혁주의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사회적 제국주의로 변모해야 한다.”

트로츠키는 서로 경쟁하는 미국의 노조 연맹들이 민주당의 지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예로 들었다. 만약 트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왼쪽 세 번째)의 내각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노조 지도자 어니스트 베빈(왼쪽 두 번째)

로츠키가 그로부터 몇 달 전 영국 노조 지도자 어니스트 베빈이 윈스턴 처칠의 전쟁 내각의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또 다른 사례로 추가했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권

“자국”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지지는 노조 관료의 본질에 내재돼 있다. 노조 관료의 역할은 계급 간 타협을 모색해서 노동자들이 착취받는 조건을 놓고 협상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실은 불완전하게 대표하는) 노동자들과 유리된 별도의 집단이 되는 특권을 얻는다.

국가를 “국익”의 대표자이자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초월한 존재로 보는 것이 계급 타협의 결정적 형태다. 물론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경제 개입에서 한 발 물러서고 노조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공세에 노조 관료가 맞서 싸우지 않아 노조의 힘이 약해지자, 노조 관료는 “사회적 합의”로 불리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에 간절히 매달렸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때마다 노조 지도자들은 만만찮은 투쟁을 조직

하기보다는 정부 개입을 요구했다.

최근 영국노총이 BMW와 타타스틸의 신규 투자[전기차와 전기용광로 도입에 따른 구조조정이 수반된다 — 역재와 맞바꿀] 요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요구한 것도 그런 경우다.

영국 제국주의 국가의 공격적 대외 활동에 대한 지지도 이러한 계급 협조 노선의 논리적 연장이다. 제1·2차 세계대전 때에도 영국노총은 자국에 대한 충성심을 열렬히 표했다. 따라서 지난주 영국노총 대의원대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지지 결의는 “사회적 제국주의”라는 더 큰 패턴에 부합한다.

그 결의는 부문적 이해득실을 앞세운 결과이기도 하다. 결의안을 제안한 일반노조(GMB)는 자신이 무기 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내세운다. 마치 현재의 전쟁 노력에 협조하는 것이 대안적 생산방식에 투자하라며 싸우는 것보다 우월한 것인 양 말이다.

그러나 집단 전체로서도 노조 관료는 지금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국”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데 충실하다.

제1·2차 세계대전 때 이러한 계급 협력이 도전받게 된 것은 전시 경제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요구하는 착취 증대에 기층의 투사들이 반기를 들면서였다. 제2차세계대전의 끔찍한 쟁투가 전개될 때 쓰인 트로츠키의 글은 지금도 유효하다. 트로츠키는 “자본주의 국가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독립성”과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촉구했다.

그것을 달성하려면 노조 지도층(현재 영국에서는 파업 물결을 혼란시키고 있다)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는 기층 조합원 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또한, 트로츠키가 강조했듯, 노조 내에서 “혁명적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출처 Alex Callinicos, “Why do union leaders back imperialism?”, (2023. 9. 19) / 번역 박이량

홍범도 홍상 철거와 윤석열의 역사전쟁

김문성

이 기사는 9월 20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TV 온라인 토론회(QR코드 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윤석열은 독립운동 중에는 건국 운동이 아닌 것도 있다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했다. 이런 공격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결정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홍범도를 밀어낸 자리에 누구를 채우려 하는지를 보면 이런 일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최근 육사는 백선엽 찬양 웹툰을 웹사이트에 다시 게재했다. 백선엽은 일제 만주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이고 한국군 초창기 지도자다. 국방부는 이렇게 밝혔다. “[육사 내 홍상은] 6.25 전쟁 영웅,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기리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인정한 위대한 독립 투사마저 좌파라는 이유로 찍어내려 한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홍상 모습

윤석열이 역사전쟁 나서는 이유

독립운동에 헌신했어도 대한민국 건국에 협조하지 않은 인물은 홀대하고, 친일을 했더라도 대한민국 편에 서는 공을 세웠으면 우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반공 자유주의”다. 사유재산권과 기업 자유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북한에 대한 군사 우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이 지금 강경하게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며 우익적 역사전쟁을 개시하는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심각한 경제와 안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체제를 수호하고, 정부 노선을 정당화하고, 이견과 불만과 불신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노선을 정당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지배자들의 친일·친미 전력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45년 해방 직후 도망갔던 친일 관료 상당수가 미군정에 의해 발탁됐다. 미국이 점령군 통치를 하려다 보니, 일제하 행정에 익숙한 인물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수치스런 전력을 냉전 시기에 반공 자유주의로 세탁했다.

이 점은 군부, 경찰, 검찰 같은 특별한 억압 기구들일수록 두드러진다. 해외에서 무장투쟁을 벌이다 귀국한 독립 투사들이 미군정 경무국의 친일파 출신 경찰들에게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본가들도 다르지 않다. 재벌 총수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독립 운동 참여는커녕 돈이라도 댄 자가 있거나 한가.

대한민국 안보를 내세우며 우익 정권의 마녀사냥을 열렬히 지지해도, 정작 부유층과 권력층 대다수는 한국인들의 독립국가 수립에 기여한 게 없다.

물론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새로 형성된 지배계급이 친일파 중심으로만 이뤄질 수는 없었다. 1950년대에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친미 국가관료층이 형성되고, 1960년대 이후 정경유착과 미·일과의 교역으로 산업 자본가들이 성장했다.

윤석열이 강경하게 지지하는 우익 역사관은 한국 지배계급의 친일·친미 전력과 지향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그들의 공으로 돌리는 데 안성맞춤인 것이다.

홍범도의 업적과 우익의 비방

홍범도 장군은 1868년에 태어나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머슴 생활을 했다. 10대 중반에 군대에 입대했다 나온 뒤 제지업 노동자, 포수 등으로 생계를 꾸리다 의병 투쟁을 시작했다.

흔치 않은 평민 의병장으로 이름 높았던 홍범도 장군은 한일 병탄 직전에 탄압을 피해 간도와 함경북도 북부로 활동 무대를 옮긴다. 그는 1918년부터 무장 투쟁을 재개하는데, 이동휘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들과 가까웠다. 또, 러시아 혁명 정부와의 연대를 중시했고, 1927년 러시아 공산당 가입 이후 평생 당적을 유지했다.

홍범도 장군의 가장 큰 전적은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다. 두 전투는 항일 무장 투쟁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전투로 평가된다. 홍범도 장군이 평민 출신이고 소련에 거주했다는 점 때문에 폄훼되면서 한동안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과 이범석의 승리로만 알려졌다. 그러다 최근에야 홍범도 부대의 구실이 더 컸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홍범도 부대의 명성은 기강과 전투력뿐 아니라 파벌적이지 않아서 다른 독립군 부대들과의 협력에 능했던 데서 나왔다. 그래서 항일 무장 독립 투쟁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물론 요즘 우익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이 그의 민족해방투사 경력에 흠인 것처럼 비난한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책임이 있다, 레닌을 만난 것도 자유시 참변을 보고하기 위해서였고 이후 무장 투쟁을 포기했다고 비방하는 기사를 최근에 실었다.

이런 얘기들은 모두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청산리 전투 당시 홍범도 장군 나이가 이미 만 53세였다. 평균 수명이 80세인 지금도 군인 정년이 60세이다. 가난이 만연한 100년 전에 혹한의 추위 속에서 풍찬노숙 독립군 생활을 수십 년 해 온 홍범도가 55세 나이에 전역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

우익은 마치 레닌이 자유시의 한인 독립군 사살을 지시했고, 그 지시를 수행한 홍범도가 레닌에게 경과를 보고하고 권총을 포상으로 받은 것처럼 암시한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혁명, 레닌, 홍범도 모두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다. 우선,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과 맺은 관계 등 현재 논란되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20세기 초 한인 독립운동이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1920년 청산리 전투 승전 기념 사진

조선 독립운동과 러시아 혁명의 영향

제1차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이미 아일랜드, 인도 등 세계 각지의 민족 해방 운동이 분출하고 있었다.

마침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노동자 혁명이 성공해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았고, 신생 노동자 국가는 러시아 내 소수민족들의 자결권을 보장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인들도 이런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력 확산을 차단하고자 민족자결주

의를 주장했다. 그러자 조선의 민족 운동 지도자들은 전후 처리 과정을 서구 강대국들에 독립 지지를 호소할 기회로 여겼다.

그러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된다는 단서가 달려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했다.

게다가 정작 파리강화회의에서 승전국들은 패전국의 식민지를 독립케 하지는커녕 자기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강압적으로 확보한 중국 산둥반도의 이권을 인정받았고, 미국은 일본을 지지해 조선의 독립 염원을 외면했다.

이런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항거에 나섰다. 1919년 조선의 3·1운동이나 중국의 5·4운동이 대표적이다.

3·1운동은 1919년 3월~5월에만 2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나선 거대한 저항이었다. 당시 인구 8명당 1명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두루 알다시피 3·1운동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3·1운동을 계기로 노동자·농민의 대중 운동뿐 아니라 무장 항쟁도 활발해졌고, 이는 봉오동-청산리의 승리로 이어졌다.

많은 청년들이 3·1 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제국주의에 맞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러시아 혁명은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다. 볼셰비키 정부는 제국주의 나라의 국가들과는 달리 제정 러시아의 중국 내 이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등 민족 해방 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했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조선의 민족 해방 운동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거액의 자금과 사람을 지원했다.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 원 규모의 금화였다. 상해 임시정부에도 무기 지원과 공조를 약속했다.

그래서 독립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고,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 운동가들이 러시아 혁명 정부와의 연대를 중시하게 됐던 것이다.

러시아 혁명 직후 자본주의 열강은 혁명을 파괴하려고 백군을 지원하며 군사 간섭을 자행했다. 일본은 연해주에 무려 7만 명의 대군을 보냈다. 러시아 혁명과 조선의 독립 운동은 연해주 등지에서 공동의 적과 맞서야 했다.

이제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과 조선 독립, 세계적 변혁이 서로 연관돼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노동계급 국제주의가 식민지 민중에게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실천으로 입증하려고 했다.

자유시 참변의 비극

우익이 홍범도 비난의 소재로 사용하는 자유시 참변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다.

만주와 연해주를 무대로 싸우던 조선의 독립군들은 일본이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1921년 대대적인 민간인 학살, 이른바 간도 참변을 자행하자 불가피하게 북쪽으로 후퇴했다. 독립군들은 러시아령 자유시에 모여 군대를 통합하기로 한다. 러시아 측은 자유시 입성 때 무장 해제를 요청하고 대신 통합 후 러시아의 신식 무기를 새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즘 우익의 거짓말과 달리 이 약속은 지켜졌다. 자유시 참변 후에도 자유시에서 통합된 한인 부대들은 러시아 적군의 독립 부대로 편제됐고 새로 무장해 시베리아와 연해주 일대에서 백군 및 일본군과의 전투를 이어 갔다. 러시아 측이 선 무장 해제를 요구한 것은 당시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일본 군대의 본격 출병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었던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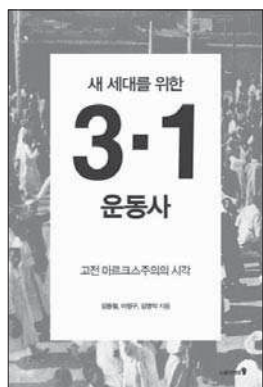
당시 러시아 정부와 공산당의 방침은 한인 독립군들이 통합을 이루고 러시아 영토 내에 머물면서 적당한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인 독립군들은 통합 후 국내로 진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때를 기다리며 재정비를 해야 했다. 비사회주의 계열 부대 상당수도 무장 해제에 동의했던 이유다.

그러나 한인 사회주의자들 간의 갈등이 문제였다. 상하이파가 이끈 사회화령 의용군은 이르쿠츠크파와의 지휘권 경쟁 속에서 무장 해제와 자유시 합류를 거부했다. 결국 이르쿠츠크파가 주도한 통합지휘부(고려혁명군정의회)가 강제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적어도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체포됐다. 이것이 1921년 자유시 참변이다. 홍범도 장군은 당시 진압 현장에 있지 않았고, 분열상에 반대했다.

홍범도 장군은 1922년 극동민족대회에서 레닌-트로츠키와 면담을 했

▶ 8면으로 이어짐

추천 소책자



새 세대를 위한 3·1운동사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시각

김동철, 김영익, 이정구 지음
노동자연대 | 72쪽 | 3,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구입하기



▶ 7면에서 이어짐

다. 만남을 먼저 요청한 것은 레닌이었다. 항일 투쟁에 대한 격려와 감사 표시와 함께 자유시 참변의 경위와 홍범도 장군의 견해를 듣고자 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러시아 당내 보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듯하다.

그 자리에서 홍범도는 양 파의 분열주의를 지적함과 동시에 러시아 극동 정부의 독립군 처벌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레닌은 이에 동의해 독립군을 석방시켰다. 레닌은 홍범도 장군의 반제국주의 투쟁 업적을 높이 평가했고 마우저총을 선물하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1922년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에 참가 중인 홍범도 장군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차이

그러나 스탈린 시대 들어 많은 것이 달라졌다. 스탈린은 1923년 독일 혁명의 실패로 러시아 혁명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러시아 한 나라에서도 무계급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며 러시아 애국주의를 부활시켰다.

1920년대 말 이후 코민테른은 각국의 공산당들을 소련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1926~27년 중국에서 공산당을 국민당에 복종케 해 재앙을 낳았고, 일본을 자극할까 봐 극동의 항일 투쟁을 자제시키고 나중엔 러시아 영토에서 한인의 무장을 금지했다.

스탈린은 소수 민족의 자결과 저항이 두려워 희대의 패악인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했다. 연해주에서 집단농장 일을 하던 홍범도도 1937년 한인 17만 명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연해주 해방 운동에 참가했던 한인의 일부는 강제 이주 직후 스탈린의 유혈 대숙청에 희생됐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러시아 혁명의 퇴보와 스탈린 체제의 악행을 이용해 레닌주의와 진정한 사회주의 전통 전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 우파의 관심사라는 점이다. 레닌 시대와 스탈린 시대의 차이는 지도자 개성의 차이 문제가 아니다. 둘 사이에는 “피의 강물”이 흘렀는데, 딛고 선 계급 기반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의 고립과 스탈린주의 체제의 등장은 조선의 독립운동에도 중대한 장애물이었다. 물론 초기 코민테른의 도움과 조언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고, 무지와 경험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이 한인들의 조선 독립운동을 고무했던 것과 달리 스탈린주의는 오히려 장애물이 됐다.

카자흐스탄 시절 행적을 보면, 홍범도 장군은 러시아 국가의 성격 변화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레닌 생전의 불세비즘 전통에 매료돼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지지를 유지했던 듯하다.

우익의 역사전쟁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렇다면 왜 더불어민주당은 우파가 그토록 싫어하는 홍범도, 김원봉 등을 우대할까? 문재인 정부 시절, 홍범도 유해 송환과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은 민주당 판 역사 다시 쓰기의 일부였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친 자본주의 세력이었음에도 배제됐다. 그래서 3·1 운동 - 임시정부 - 독립운동 - 광복 -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역사를 재서술하면서 자신들이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 있는 주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군이 독립군에서 임시정부 광복군, 그리고 육군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그 일부다. 홍범도 우대는 이승만과 이범석 등 대한민국 초대 정부를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대항마 성격도 있다.

그러나 이 역사관은 현실성이 떨어져고, 지배계급의 주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방사가 바뀌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좌파는 대한민국에 민족 정통성 또는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지금 온건 좌파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이 있다거나, 대한민국 군대의 정통성은 독립군에게 있다거나,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개혁주의적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낸다.

우리는 급진 좌파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역사 해석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좌파 상징을 밀어내는 것은 공식사회와 국가 기구들의 우경화를 노리는 것이므로 이를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가의 표준을 좌파 배척적이고 우익적으로 세울 때 그 화살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논쟁에 개입해 우익의 역사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 속의 자랑스런 혁명적 전통을 재발견하고 교훈을 얻으며 되살리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16분
레닌과 민족자결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본다

레닌과 민족자결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본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홍범도 홍상 철거와 윤석열의 역사전쟁’ 토론회 시청자 전화 발언

☎ “많은 독립운동가가 혁명 러시아에 이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제자도 말했듯이 제 1차세계대전 이후 국제 상황을 보면 홍범도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러시아 혁명에 이끌리게 된 것이 이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 조금 보태려 합니다.

제1차세계대전은 식민지 사회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고, 거대한 전쟁으로 기존 제국주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면서 각지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세계를 재구성하고 재분할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오스만 제국이 밀려난 아랍 지역을 프랑스와 나눠 먹고 아랍인들의 자결권을 무시해 버렸죠.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조선에서 특별히 잔인한 조치를 취한 것 같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당시 김규식 선생은 독립 지지를 호소하려고 파리강화회의에 찾아갔지만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죠.

이런 일들에서도 드러나듯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는 굉장히 위선적인 것

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 혁명 정부는 민족 해방 운동을 진지하게 지지하고 지원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20년 바쿠에서 열린 동방피억압민족대회에 한 선언문은 “중국 북부와 조선에서 일본 헌병과 관원들이 자유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총살형과 교수형에 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비난하고 조선과 중국의 자결권을 지지했습니다.

파리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김규식 선생은 1922년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에서 환대받았고, 고무받은 김규식 선생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모스크바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중심지로서 극동의 피억압 민족 대표자들을 환영하는 데 반해, 워싱턴은 세계 자본주의의 착취와 제국주의적 팽창의 중심입니다.”

바로 이 대회가 홍범도 장군도 참석해서 레닌을 만났던 그 대회입니다.

김규식 같은 민족운동 대표자의 눈에도 당시 민족 문제에 대한 서구 열강과 혁명 러시아의 태도는 명백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 전통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레닌이 선물한 권총을 찬 홍범도 장군

☎ “홍범도 장군의 혁명적 삶을 소개합니다”

최근 이동순 작가가 쓴 《민족의 장군 홍범도》라는 책을 봤습니다. 840쪽에 달하는 이 책은 홍범도 장군의 삶을 매우 자세하고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인상적인 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홍범도는 당시 독립운동 지도자 중 드물게 빈농의 자녀이자 공장과 탄광에서 일했던 노동자 출신이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늘 백마를 타고 금빛 견장이 번쩍이는 군복을 입고 다닌 반면, 홍범도 장군은 일반 사병과 다를 바 없는 소박한 군복과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죠. 유생 출신 의병장들이 서민 출신 부대원들을 차별하기도 했던 때

에, 홍범도의 이런 면모는 대중의 신망을 받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을 때 홍범도는 혁명의 중심지였던 페트로그라드에 우연히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홍범도는 밤새 들리는 10월 혁명의 함성에 흥분된 심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가난한 백성이 땅의 주인이 되고, 압박과 착취가 없는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혁명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피억압 민족들로 혁명 운동이 번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혁명은 식민지 민

족 해방 운동을 고무했고, 한반도에서도 1919년 3.1운동을 고무해 침체돼 있던 항일 무장 투쟁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홍범도의 가장 성공적인 전투였던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홍범도의 출신 배경이나 그가 벌인 무장 항쟁이 러시아 혁명에서 받은 영향을 생각하면, 홍범도가 훗날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단지 소련의 지원을 얻으려는 실용적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홍범도는 독립을 이룬 후의 한반도는 그가 직접 목격한 러시아 혁명이 이룬 것과 같은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법하죠.

윤석열 정부와 우파는 홍범도가 자유시 참변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난합니다. 그러나 홍범도는 한인 공산주의 두 분파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고, 평소의 신망까지 더해져 자유시 참변으로 체포된 병사들의 판결에 참여해 그들을 최대한 석방시키려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홍범도와 같은 위대한 독립 투사들을 고무하고 지원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초기부터 국제적 반제국주의 투쟁과 세계 혁명의 일부로 자신을 보는 시야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닌의 민족자결권 지지는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의 일부”

요즘 우파 언론을 보면 레닌이 민족 해방 운동을 그저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많은데요, 저는 레닌의 민족자결권 지지가 단지 책략 차원이 아니었다는 점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레닌은 민족자결권 지지를 당시 제국주의 나라 혁명가들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봤습니다. 자국 국가에 의해 억압받는 민족들의 투쟁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면 이들의 자결권까지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당시에는 그러지 못하는 좌파가 수도룩했습니다.

민족자결권 지지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두고 자결권 지지를 수단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본 제국주의도 볼셰비키가 맞서려 했던 제국주의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연사가 잘 말했듯이 공동의 적을 두고 싸웠던 것이죠.

사실 판 목적을 품고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건 언제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등쳐 먹는 지배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반면 초기 소련의 민족자결권 지지는 피억압 민족의 신뢰를 되찾고 노동자들의 국제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었습니다.

예컨대, 볼셰비키 정부는 소수 민족 지역에서 그런 신뢰를 깨뜨리는 자기당원들을 매우 강력하게 단속했습니다.

사실, 초창기 소련이 외세의 침공에 휩싸인 상황에서 민족자결권을 인정한 것은 어느 정도 모험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역사적 반감이 있는 민족들이 소련에 맞서는 데 이용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자결권을 인정받고 백군에 가담

한 민족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볼셰비키 정부는 최대한 원칙 있는 입장을 고수하려 했고, 그래서 그들의 지지를 되찾기도 했죠. 우랄산맥 서부 지역의 바시키르인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는 소련이 내전에서 승리하는 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내전으로 혁명 정부는 자신의 기반이었던 노동계급을 대거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 기구를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국가 관료가 소련을 주도하게 되고, 이들을 대표한 것이 스탈린이었던 것이죠. 연사께서 레닌의 소련과 스탈린의 소련은 딴고 선 계급 기반이 전혀 달랐다고 지적했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스탈린은 관료화된 국가를 강화하고 종국에는 강대국과의 경쟁 속에서 국가가 축적을 주도하는 형태의 자본주의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탈린은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억지 통합을 밀어붙였습니다. 말년의 레닌이 병상에서 이런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고 스탈린에 맞서 싸웠을 때 쟁점이 됐던 것도 스탈린이 그루지야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통합 문제였습니다.

물론, 스탈린이 정통성을 내세우려고 레닌의 계승자를 자처했기 때문에, 소련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분명하게 인식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가졌던 것은, 제국주의에 적극 협조하며 일반 대중을 짓밟고 쥐어짠 자들이 벌인 일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전쟁은 우파적 공격의 맥락”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한 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역사 교사입니다. 마침 수업 진도가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이라,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것을 두고 찬반 토론을 해 봤습니다. 모든 반에서 압도 다수가 흉상 철거를 반대했죠.

윤석열 정부와 우익들은 갈수록 침해지는 미·중 갈등과 경제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역사를 정통으로 삼고 싶어 하는데요, 해방 후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홍범도 장군을 역사에서 도려내며 우파적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교육에서 사회주의를 비롯한 좌파적 민족 독립운동이 재조명되던 시기는 1987년 투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부터입니다. 이는 2003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됐고, 근현대사 교과서가 국정이 아닌 검정 교과서로 처음 발행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 교육에서 홍범도 장군이 재조명된 계기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우파들은 이러한 상황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2008년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뉴라이트의 역사전쟁이 대표적인데요, 뉴라이트는 냉전주의와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우파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다 퇴진 운동으로 그것이 좌절되기도 했죠.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표적인 뉴라이트 단체는 한국자유회의인데, 이 단체 출신 11명이 정부의 여러 요직에 기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인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그 단체가 출범할 때 실행 간사였습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역사전쟁은 우익과 윤석열 정부가 친일과 친미를 정당화하고,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역사 다시 쓰기도 비판적으로 봐야”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의 강경 우익화 행보인 흉상 철거에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기본적으로 육사가 홍범도 흉상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국가는 화해 불가능한 계급 적대의 산물이자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군대 역시 자본주의 국가를 수호하는 지배계급의 도구이고, 육사는 군대를 이끄는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결코 평

범한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홍범도 흉상을 세워 마치 홍상의 아우라로 육사를 독립군의 정신을 이은 것처럼 포장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군대 미화 작업도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발제자가 말한 민주당의 역사 다시 쓰기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역사 다시 쓰기는 오히려 지배자들의 도구인 국가가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말해 진정한 사회 변혁에는 더욱 해로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흉상을 세운 문재인 정부 역시 비판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요,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에 협력하면서 말로는 항일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위선적 행보의 일환으로 독립 유공자들의 유해 송환을 추진했습니다. 우익들이 공산주의자 홍범도를 비난한다면, 민주당은 공산주의자로서의, 당시로 치면 레닌주의자로서의 홍범도를 숨기려 합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를 단지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며 노동자

투쟁을 생략하는 메커니즘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선택적으로 홍범도 정신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역사로 왜곡하는 것 역시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흉상 철거에 반대하는 평범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논쟁할 때 윤석열 정부의 강경 우익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더 나아가 발제자가 말한 민주당의 역사 다시 쓰기와 육사에 대한 비판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의 정리

채팅창과 전화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질문과 주장도 많이 나왔는데 저도 도움과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윤석열의 강경 우익화와 역사전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관계에 대한 얘기는 채팅창에서도 잘 나왔고 역사 교사라고 하신 분의 전화 발언이 윤석열의 의도나 목표를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지금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질서와 국가 안보 이념을 앞세워서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탄압하고,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국가기관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범도를 왜 공격했을까?,” “이승만을 왜 띄울까?” 하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지키고 정당화하려는 노선, 지키려는 체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는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해방 직후에 당시 민중에게 더 존경받고 세력도 강했던 좌파들을 미군정과 동맹해서 물리치고, 또 한국 전쟁에서 한미동맹을 수립하면서 지금의 한국 지배계급의 토대를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띄우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일이지요.

반대로 홍범도 장군은 그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질서를 타파하려는 러시아 혁명을 지지했던 인물이기어 어떤 형태로든 이런 사람을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육사에 홍상을 세우고 하면서 중시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저들한테는 없애야 될 일들이죠.

그리고 “홍범도가 인기가 있는데, 왜 공격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들이 지금 자신감이 있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도 봐야 됩니다. 아주 거칠게, 거의 광분하는 것처럼 공격을 해는데, 저들은 지금 체제 위기와 그것이 정권의 정치적 위기로 이미 발전해 있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

그리고 [유명 인강 강사인 전한길 씨의 주장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전한길 씨는] 내전이 끝났는데도 땅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땅을 준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료에서도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연해주 고려인 독립군. 일본군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러시아 혁명 정부와 함께 무장 투쟁을 벌였다.

시간 순서도 맞질 않아요. 연해주와 시베리아에서는 자유시 참변 이후 1922년까지 내전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먼저 러시아의 서부 쪽에서 내전에 승리한 후 동부인 연해주 쪽에 전력을 집중해서 연해주 해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반격을 가해서 1922년에 내전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군들이 러시아의 땅이 필요했겠습니까? 조선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르쿠츠크파와 상하이파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초기] 인적 구성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르쿠츠크파는 러시아로 진작에 이주해서 2세, 3세가 되는 인물들이고 국적도 러시아였고요. 상하이파는 대다수가 독립 투쟁을 위해서 망명한 한인들이었죠. 실천적 입장도 약간 달랐어요.

이르쿠츠크파는 실천적으로는 임시정부와 공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상하이파는 임시정부를 개조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극동민족대회의 결과가 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조선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발제에서 말한 [제1차세계대전 후 처리를 위한] 파리강화회의가 있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가 모여서 결정한 워싱턴 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도 조선 독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극동민족대회에서는 바로 이 회의들을 비판하면서 조선 독립을 지지하고요. 그리고 조선 독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하이 임시정부를 개량해서 투쟁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육사에 홍범도 홍상이 세워져 있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냐는 질문이 있었다. — 편집팀]

국가가 지금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 수단들, 그러니까 교과서나 학교, 국가 기념 사업 같은 데서 좌파를 배제하겠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윤석열의 강경 우익화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우호적인 소통이 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주장은 추상적인 것이죠. 사실 육사라는 게 자본주의 체제 수호 기관이니 [홍범도 홍상]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체제 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이나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노동법을 우리가 고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현재의 핵심 맥락은 윤석열 정부가 체제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노선을 위해서 좌파를 공격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감추고 [저항해 봐야] 그런 것들이 소용없다는 체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일 무장 투쟁은 위대한 민족 해방 운동이었지만 결국은 독립을 독자적으로 성취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어떤 교훈들을 이끌어 내야 할까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식민지 독립이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피지배 민족의 독자적인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족 해방 투쟁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유일한 변수는 아니라는 거죠. 국제적인 정세 상황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인데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당시에 러시아 혁명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혁명이 국제적으로 확산됐더라면, 그렇게 해서 조

선의 독립 투쟁과 중국의 항일 투쟁과 일본에서의 혁명적 투쟁들이 만났더라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가능성, 희망 같은 것을 상상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의 반동적 역사관은 우리 미래의 희망을 뺏으려는 것이지만 혁명적 과거는 그 안에 미래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국제주의

지금 한국의 반정부 투쟁이든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든간에 그것이 민족 해방 운동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더는 억압받는 민족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국가도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서방 강대국을 지원하면서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정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립 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한 [자유시 참변과 같은] 몇 가지 안타까운 사례에서 부차적이지만 분열주의, 종파주의 같은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나쁜 것인지, 피해야 할 것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훈들을 지금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생생한 현실에 능동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혁명적 전통은 바로 혁명적 조직의 강화, 혁명적 좌파의 활동·구실과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년차 도덕 교사와의 대화

“관료적 통제가 아니라 학교 운영에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이상헌 교사는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로 학교 수업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했다가 민원이 제기돼 광주교육청에 의해 직위해제되고 형사 고발됐었다. 다행히 1년여 만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무혐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했다(징적 3개월).

배이상헌 교사는 2019년 광주교육청의 직위해제와 고발, 징계에 항의해 투쟁해 왔고, 많은 교사와 교육 운동가들이 그를 지지해 왔다. 교육청과의 힘든 투쟁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간경화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해 왔다. 다행히 최근 항암 치료가 무사히 끝나서 광주 화순에서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처지가 크게 주목받으며 ‘교권 보호’에 대한 지지가 커졌습니다. 교권 개념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경향신문> 칼럼을 쓴 이범 씨의 지적처럼 한국에서 교권은 있어 본적이 없어요. 사실 교권에 관련해서는 법적 개념이 없어요.

교권과 인권의 대립 같은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일부 활동가들은 ‘노동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권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노동자 연대>에 실린 기사(본지 468호, ‘서이초 사건: 교권 보호 대책보다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처럼 논조를 교육 환경 개선이라거나 교사 증원 식의 문제로 환치하는 것도 저는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권리 체계가 학교 안에서 작동돼야 하는데, 권리에 따라서 나오는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리고 권한이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절차, 그다음에 서로 분쟁으로 발전했을 때 그 분쟁을 해소하는 절차까지 조망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사 노동의 주요 구성 요소는 교과 수업과 학급 담임인데, 담임 업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교사들은 ‘생활교육’이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생활교육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생활지도 고시를 내놓았죠.

보통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게 개별 학생 간의 갈등이 아니라 때때로 보면 그냥 집단적인 왕따 같은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가해고 어디까지 피해인지를 딱 설정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사들은 예전부터 그 일을 그 나름

의 교육적 통찰력을 가지고 접근해 왔어요. 물론 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교사와 관심이 있는 교사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2012년에 갑자기 학교폭력처벌법이 들어오면서 아주 획일화됐어요. 교사는 학교에서 폭력이 생기면 폭력의 증인 역할만 하게 됐어요. 교사가 추가로 가해 학생에게 뭘 지도를 한다거나 피해 학생을 지도하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황당해진 거예요.

갈등을 교사가 경중에 따라 조정할 권한이 없죠. ‘학폭’이라고 규정되는 순간 교사는 공식적 조사 심의기구를 위해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하고 입증하는 역할만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교사가 개입해서 막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고 적절한 징계도 하고, 교사들 사이에 징계 기준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학폭법 도입 이후] 교사들은 이제 절망하게 됐죠. 더는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되고 그냥 증거 서류만 확인하고 넘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사의 보조자가 됐어요.

지금 아동학대처벌법도 상당 부분 그런 면이 있죠. 교사의 지도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사는 수업만 하지, 애들이 수업시간에 떠들어도 그냥 놔두게 되는 거죠. 어떤 집단의 룰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확인하고 약속한다는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합의하는 것들을 교사가 징검다리를 놓고 그랬던 것들이 다 이제 무의미해지고 불필요한 개입을 하게 되는 꼴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담임이 출석 체크만 하는 거예요. 가서 오늘 몇 시에 몇 명 나왔어, 누구누구 지각이야, 그리고 빨리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학부모한테 연락해 줘. 이런 행정 사무만 보는 거예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

요. 청소년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교육자로서 자기 직분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공허해져 버렸죠.

‘정서적 학대’ 같은 모호한 조항에 의해서 교사는 수업이나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분별하게 민원 대상이 돼서 교사들이 시달리는 문제에 대해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막자는 게 지금 교권 보호의 한 요소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행정부, 교육 행정 구조는 굉장히 관료적인 구조예요. 공문으로 위에서 집행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지금처럼 교사들이 거대한 집회를 하고 또 학생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저항하는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교육부 관료들이 어떤 교육 행정이 해결할 과제인지 아닌지 자체 판단을 하지 못해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냥 숫자에 자기를 필요한 정치적 전시물만 만들려고 해요.

진보교육감 때 만들었던 학교 자치 조례는 사실 자기[진보교육감]가 옛날에 교사 운동하면서 만들었던 학교 자

치에 대한 좋은 개념들을 완전히 진보교육감 식의 형식적 행정거리로 만들어 왔고요.

학교를 그냥 하나의 통제되는 관리단위로 봐서는 교권이라는 개념은 어떤 형태든 간에 생길 수가 없어요.

교육 운동과 좌파의 일각에서는 “교권이 진보적 교육 운동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권 보호 요구와 학생 인권은 대립된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공동체 빛’의 그 같은 토론회 제목을 보고, 아니 지금 이 판국에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표현을 설정했을까 싶어서 발표문들을 봤더니, 정말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면서 그냥 처벌 향수처럼 정리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교권 요구가] 퇴행적이라 써 놓았던군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교사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방어적 담론에 충실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방어적 담론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과 수업을 못



김영조 기자

하겠다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집단 아노미가 있어요. 교사도 학생도 “도대체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뭐야, 도대체 이 공간에 어떤 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거야”라는. 그 속에서 교사들이 [교권 보호라는] 방어 담론을 펴는 거죠.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사실 모든 것을 법제의 문제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법제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교원지위법에서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교사의 소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집행하지 않아요. 교원의 소명 절차를 명시한 교원지위법은 강제 조항도 없어요. 아동학대처벌특별법에 기관장들의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실행은] 정치적 문제죠.

행정가들이 자율적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의심할 만한 정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죠. 투서 하나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입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재 학교에서는 모든 걸 투서 하나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입증된 것처럼 해서 거기서 신고 의무자인 관리자, 기관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고 있어요.

아동학대 처벌법의 신고 의무 조항 때문에 관리자들이 자기 보신용으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교사들을 고발하는 식으로 사실검증 없이 [처리하는 경향이 생겼을 수 있지만, 민선 교육감들이 투표에서 그 학부모 여론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걸 의식해서 관료적으로

처리한 영향도 있어요. 장휘국 교육감(3선 광주교육감)은 2019년 10월에 광주시의회에서 ‘교사와 학생이 다투면 학생 편을 들고 교사와 학부모가 다투면 교사 편을 들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현재 입시 경쟁이 지배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라는 건 필연적인데, 이런 갈등을 푸는 방식이 무조건 고소·고발로 가는 게 해결책은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갈등만 키울 뿐인데.

학교 운영의 민주주의,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해요. 현재 입시도 변해야 되고, 충분히 공개적이면서 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가 갖고 있는 자생력을 인정해 줘야 교사가 학부모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운동은 전례 없이 큰데요. 전교조 창립 멤버로서 교사 운동을 수십 년 해 오셨는데 최근 교사 운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전교조의 모습은 사실 너무 경직돼 있어요. 대개 민주노총이나 진보연대나 어떤 정파적 연결고리랄까 … 대통령 선거 지향적 형태로 구조화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 싸움이라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싸움의 전선들을 다양하게 읽어내고 그런 것들을 총화하는 구조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교조가 지금 계급 의식이 투철하다거나 또는 어떤 변혁적인 관계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잘 교양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거나 더 많이 잔존해 있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초기의 교육적 전통은 지금 상당히 희박하고요.

교사 노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훨

씬 더 조합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교사들의] 수용성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교조는 중앙 상층부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총괄해서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오케이가 안 되는 구조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본부에서 막 핑계대기 좋아요. 싸우기 싫으니까.

교사 노조가 유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은 약간 개별 이익에 급급하고 특히 기간제 문제라거나 공무원이나 등등과 관련해서 노동계급의 원칙을 좀 포기한 꼴이죠.

전교조도 기간제 정규직화는 지지하지 않았는데요.

전교조는 조창익 위원장이 있을 때 정부가 말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기간제 정규직화를) 말하면 안 된다고 봤는데요. 기간제는 정부가 먼저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야지, 우리가 먼저 [정규직화를] 내놓고 포탄을 맞으면 안 된다는 게 전교조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교사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여파가 오래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교사 운동의 여진은 오래갈 것 같아요.

지난 주 토요일 집회에 발언 신청을 했는데, 접수자가 너무 많아서 못 하게 됐어요. 그날 집회의 테마가 지속성과 연대성이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지속성·연대성·현장성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의 개폐만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 대한 근접 감시를 어떻게 일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도 고민이에요.

최근 집회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좋은 때가 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 보다’ 하고 막 기대를 걸고 대중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혼란스러워요.

광주시교육청과의 싸움에서 나타난 핵심적 문제는 진보교육감 지키기와 여성 운동[광주 여성단체와 전교조 여성위]의 형식적 슬로건이죠. 분리 조치는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것. 이를 지키겠다는 것이 광주에서의 싸움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배이상헌 사건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교권 투쟁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어느 날 민원이 들어왔다면 수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맞나? 앞에 선생님이 다 그렇게 하면서 다 감춰져서 난 많이 고민해서 이걸 아니지 않냐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싸운 거예요. 단지 나를 살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운동적으로 이걸 문제로 삼으려고 운동적인 과제를 만들려고 내가 싸운 건데, 그게 보편적인 교사들의 모순과 연결돼 있는데 [전교조 지도부가] 솔직히 그걸 외면한 거잖아요. 등돌려버린 거잖아요.

이 법[교권보호 4법]이 개정돼도 교권에 대한 것은 여러 모로 갈등이 계속될 테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학교의 모순과 부조리는 계속될 거예요.

지금까지 9번 집회를 했는데 이 9번의 집회가 참 대단한 성취인데, 이게 방향을 못 잡으면 생각보다 지속성이랄까 힘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학교 정책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형식적 장치에 우리가 오히려 포섭돼 가지고 또 끌려다닐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긴장하고 바라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정리 정진희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사 운동이 첫 성과를 내다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터져나온 지 2개월 만에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낸 것이다. 그동안 매주 주말 폭염 속에서도 교사 수만 명이 집회를 개최했고, 9월 2일 집회에는 무려 20만 명이 참가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 행동에는 전국적으로 15만 명이 참가했다. 이 중 수만 명은 교육부의 중징계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참가했다.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개정안들이 교사의 교권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을 재천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몇 가지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는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돼, 조사·수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넘게

교사들이 실질적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당해 온 것을 고려하면, 이는 교사들의 숨통을 틔워 주는 조치가 될 것이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도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동학대 조사·수사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교육감이 교사들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상당히 뒤늦었지만 시도 교육청들도 교권 보호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를 받는 교사들을 변호할 변호사 증원, 교권 침해 전수 조사, 악성 민원인 고발, 교사의 심리검사 실시 등이 발표됐다.

첫 걸음

많은 교사들은 이번 입법과 교육부·교육청의 대책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 조치가 실제 효과를 내려면 추가적인 입법과 정부 지원 방안 등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행동 9월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 집회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교사의 생활지도를 제외하는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에도 교사 6명의 죽음이 더 알려졌지만,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후 대책 마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서이초 사건의 경우 교육청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에 들어갔지만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초등교사의 사건 이면에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떤 학부모는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 자녀의 치료비 명목으로 8개월 동안 교사에게 400만 원을 뜯어내는 짓을 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건들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 교육부가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다가 교사의 비극적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한 관리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마련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교육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한다며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해, 수업 방해 등을 하는 학생을 일시 분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분리 학생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각 학교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학교민원대응팀 구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교사, 행정직, 공무원 등

이 포함된 민원대응팀 구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를 위한 추가 인력과 재정 지원 등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책들이 교사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업무 분담을 둘러싸고 교사 간, 그리고 교사와 그 학교의 다른 노동자들 간 갈등과 혼란만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긴축 재정과 세수 감소를 이유로 올해 교육청 교부금을 대폭 삭감했다. 올해 지방교육교부금은 75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지급액은 65조 원으로, 11조 원이나 줄인다는 것이다. 내년 교부금도 이미 7조 원가량 줄이는 것으로 발표됐다.

교사 선발도 대폭 줄이고 있다. 내년 초등교사 선발은 올해보다 11.3퍼센트나 줄었고, 유치원 교사도 28퍼센트 줄이기로 했다.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는 데다 교권 보호 대책으로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해진 마당에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있으니, 교사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정부는 늘봄학교 확대 정책과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과 삭감된 예산으로 각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교육예산 긴축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말뿐인 교권 보호 대책 때문에 교사들은 행동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추석 이후인 10월 14일에도 추가적인 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에게서 받아 낼 때까지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강동훈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주)레프트미디어 현재호: 서울대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월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39

리비아 홍수, 기후 변화와 나토 개입이 낳은 재앙

이사벨 링로즈

이번 리비아 참사로 최대 2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집을 잃었을 것이다. 이런 참상은 제국주의 개입으로 갈갈이 찢긴 사회에 기후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결과다. 이번 홍수는 1927년 이후 북아프리카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홍수다.

9월 10일 밤 태풍 '다니엘'이 리비아 북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해 끔찍한 홍수가 발생했다. 수면이 상승해 데르나 시(市) 인근 댐 두 개가 무너졌다.

생존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승하는 소리가 나길래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이웃집이 물살에 휩쓸려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인 칼릴 보우쉬하는 어머니와 함께 물에 휩쓸려 거리로 떠나려 가다가 문짝을 잡고 근처 집으로 기어 들어갔다.

“시신들이 떠다니고, 자동차가 떠다녔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였지만, 1년은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댐이 무너진 곳에서 서쪽으로 약 240킬로미터 떨어진 리비아 동부 도시 알바이다·알마르스·토브룩·타케니스·알바야다·바타·벵가지도 피해를 입었다.

이달 초 형성된 태풍 '다니엘'은 리비아 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그리스·불



술한 댐 붕괴 경고를 흘려 넘긴 리비아와 세계 지배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가리아·튀르키예에서 홍수를 일으켰다. 그리스 관측 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그리스에서 16명, 불가리아에서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태풍은 이른바 “오메가 블록”이라는 기후 현상에 뒤이어 발생했다. 점점 빈발하는 “오메가 블록”은 두 개의 저기압골 사이에 고기압이 끼었을 때 발생하는 기상 현상으로, 평소보다 더 심각한 폭우를 유발한다.

댐 두 개가 인근에서 무너진 인구 10만 명 도시 데르나에는 3000만 입방미터(300억 리터)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파고가 10미터나 되는 파도가 도시를 휩쓸었다.

도시 약 25퍼센트가 사라졌다. 그중 대부분은 바다로 휩쓸려 들어갔다.

리비아는 2011년에 나토가 폭격을 동반해 개입한 후 내전이 터진 혼돈 상태라, 기후 재앙에 대비가 돼 있지 않았

다.(하단 기사를 보시오.)

정부 당국은 2002년 이후로 이 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효과적인 일기에 보 같은 필수 인프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장비를 제대로 갖춘, 사람들을 돕고 구조할 응급 구호 서비스도 없다.

리비아 응급·앰블런스 담당 기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상 조건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었다. 해수면 수위, 강수량, 풍속도 마찬가지였다. 태풍 경로에 있거나 계곡 지역에 사는 가구를 대피시키지도 않았다.”

“시신들은 커다란 구덩이 세 곳에 몰아서 묻고 있다. 개별 무덤을 팔 시간도, 그릴 공간도 없다. 한 번의 작업으로 시신 500구를 수습한 적도 있다.”

9월 10일에 당국은 주민들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막았고 통금을 발령했다.

많은 지역에서 병원, 의료 시설, 전화선, 전력 인프라, 도로가 홍수에 쓸려갔다.

시신 안치소는 이미 수용 한계에 이르렀고, 거리에는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물 속이나 잔해에는 아직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있다. 시신이 부패하면서 질병이 창궐할 위험이 크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미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지중해에서 이런 기상 현상이 더 자주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확실한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으리라는 것이다.

서방 폭격이 리비아 집권 세력 간 충돌을 예비하다

2011년에 나토군은 리비아를 쪼개 놓았다. 이들은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제거할 기회를 잡으면서 그렇게 했다.

2010~2011년 아랍 혁명이 독재자들을 타도하자 서방 국가들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서둘러 개입했다.

과거에 서방은 카다피를 악마화했다가,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 기간에 다시 카다피를 동맹으로 복구시켰다. 리비아의 석유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그랬던 서방이 [2011년] 리비아인들의 항쟁이 벌어지자 항쟁을 내전으로 뒤트는 데 일조했다. 여러 군벌들에게 무기·재정·병력을 지원했다.

영국과 미국은 이런 개입이 리비아인들에 대한 “국민 보호 책임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군대는 폭격기와 크루즈미사일로 리비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뒤이어 프랑스와

캐나다 군대가 리비아를 폭격했다.

이 군대들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군대와 똑같은 부류였다.

카다피 실각으로 생긴 권력 공백을 서로 아귀다툼하는 군벌들이 메웠다.

서방 국가들은 평범한 리비아인들의 지지 없이 임시 정부를 세웠다.

결국 2014년에 쟁투가 재개됐고, 뒤이어 리비아에서 ‘아이시스’(ISIS)에 대한 서방의 폭격이 늘었다. 리비아는 동서로 쪼개져 각각 정부가 들어섰다.

2015년 말 단일 정부를 표방하며 국민통합정부(GNA)가 트리폴리에 수립됐지만, 이 정부는 인기가 없었다. 리비아 동부에 세워진 또 다른 정부가 GNA와 계속 대립했다.

유엔·유럽연합·미국은 GNA를 지지했다. 프랑스·이집트·아랍에미리

트·사우디아라비아는 리비아 동부의 정부를 지지했다.

양측은 2020년에 휴전 조약을 맺었다. 두 정부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리비아통합정부(GNU)가 수립됐다.

그러나 정치적 균열은 여전하다.

총리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는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부의 수반이다.

그와 대립하는 총리 오사마 하마드는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 세워진 국가안정정부(GNS)의 수반이다. 이 정부는 군 사령관 칼리프 하프트라르의 지지를 받고 있다.

2010년에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손꼽히게 부유하고 발전한 나라였다. 하지만 현재 리비아 인구 3분의 1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나토와 서방은 재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중동 전문 언론 <미들 이스

트 아이>는 2015년에 영국이 리비아 폭격으로 3억 2000만 파운드(약 5300억 원)를 썼지만, 인도적 지원에는 이후 4년간 1500만 파운드(약 250억 원)밖에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는 동안 리비아 해안은 노예 시장의 중심지가 됐다. 강대국들, 특히 유럽연합이 리비아에 있는 정부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유럽의 국경을 지키는 데에 리비아를 이용하고 있다. 무자비한 리비아 해안경비대는 난민들이 북아프리카를 떠나지 못하게 막는다. 그리고 현지의 깡패들은 유럽연합에 의해 되쫓겨난 난민들을 끔찍한 상태 아래에 감금한다.

출처 Isabel Ringrose, 'Libyan horror is the result of climate change and Nato's intervention' (2023. 9. 15) / 번역 김준호



“국제 협력”의 파산을 보여 준 유엔 기후정상회의



9월 20일 유엔 총회 일정에 맞춰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가 열렸다.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대표들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한 이 회의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인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바이든은 불참했다.

여러 면에서 바이든과 보조를 맞추는 윤석열도 불참했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는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미국의 선전전에 가세”(주한 러시아 대사관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지도자들이 모두 열기를 느끼는지는 모르겠다. 행동이 지독하게 부족하다.”

실상은 훨씬 암울하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각국 정부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소한 2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파리협약)

전 세계 과학자들은 그 이상 온도가 오르면 지구 기후의 안정성이 무너져 견잡을 수 없는 재난이, 예컨대 최근 리비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기후 재난이 훨씬 많은 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장기 불황과 부자들을 위한 긴축으로 선진국들에서조차 사회 기반 시설이 취약해지는 상황이라 이런 경고는 더욱 엄중하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경고조차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9월 7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 남극 대륙의 기온 상승 폭이 기존의 기후변화 모델 예측치의 곱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엔이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렵도 없는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유엔이 파리협약 체결 이후 각국의 실제 이행 상황을 처음으로 평가한 것인데, 1.5도 목표를 지키려면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퍼센트가량 줄여야 한다. 그러나 2022년 9월 기준으로 실제 감축률은 3.6퍼센트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게다가 그 감축률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공식 통계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는 배출량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자 주요 선진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든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유가 상승을 막겠다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가 석유 생산량을 늘리라고 제안했다. 미국 셰일가스 산업에는 석유 채굴 증대를 요구했고 알래스카에 새

유전 사업을 승인했다.

중국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자 석탄 채굴·연소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했고 폐쇄된 탄광을 복원해 재사용하려 한다. 영국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와 가스 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기로 한 시기를 최근 미루기로 했다.

여전한 화석연료 의존

주요 선진국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채택해 온 “탄소 상쇄” 사업들이 사실은 “효과를 뺀 뒤기만 한 무용지물”이라는 점도 다시금 드러났다.

탄소 상쇄는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온실가스 저감이나 흡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그만큼 배출량을 상쇄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배출 가스를 처리해 상대적으로 온난화 효과가 적은 가스로 만들거나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도록 하는 조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디언>이 비영리단체 ‘기업 책임’과 전 세계에서 추진된 대형 탄소 상쇄 사업 50개를 분석한 결과 39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고, 8개는 “잠재적 무용지물”이었다. 나머지 3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평가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었다. 이 사업들은 전 세계 ‘자발

적 탄소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30여 년 전 시작된 유엔의 기후변화 대응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보여 주는 다른 증표는 11월에 열리게 될 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다시금 드러날 것이다.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두바이에서 열릴 이 회의에는 각국 정부 대표단 뿐 아니라 세계 최대 화석연료 기업들도 참여해 발언권을 보장받을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들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질 것이다. 이번 주에도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수백 개의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23일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이런 항의의 시위는 더 커지고 많아져야 한다. 또 체제의 논리에 희생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벌이는 다양한 운동들과 연대해야 한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조차 점진적 변화로는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의 일부이자 체제 수호를 핵심 목적으로 삼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유엔을 통해서는 그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들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들이 단결할 때 체제의 논리에 도전할 힘과 자신감도 얻게 될 것이다.

장호중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독일 혁명 100년 기념

잊혀진 혁명
독일 1918~1923년

발제 김중환 <노동자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1004-1011-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1회 10월 4일(수) 오후 8시
제국을 무너뜨린 혁명과
구세력의 반동

2회 10월 11일(수) 오후 8시
1923년 독일공산당,
결정적 기회를 놓치다

